

일본 국토교통성, 일본상선대 해적대책 마련

편의치적선도 사건발생시 해상보안청에 통보

일본 국토교통성과 해상보안청은 7월27일 해적·해상 무장강도 대책 추진 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시행해 온 대책의 검증과 향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외신에 따르면, 선박이 해적에게 습격당했을 때에 기국에 통보해도 파나마 등은 수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파나마적 등 일본상선대의 편의치적(FOC)선에 대해 해적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일본 해상보안청에의 통보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3월에 말라카해협에서 일본적 예인선 '위타천' 호가 습격된 사건 등을 검증한 뒤, 해적사건 등의 방지에는 각종 정보를 기초로 한 '적절한 경계와 수시 경비'가 중요하고,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함께 해적사건 발생시에는 영해 주권국의 해상단속 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지원요청에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적사건 등에 대응하는 골조로서는 「선박」→「기국」→「연안국」이라고 하는 정보의 흐름이 있지만, 파나마나, 바하마, 몰타, 벨리즈 등 주요 FOC 국가들은 선박으로부터의 통보를 수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04년 7월1일 현재 일본상선대 1,896척 중 외국용선은 1,797척(FOC선 628척, 단순용선 1,169척) 등으로 이중 1,327척이 파나마적이다.

이날 가진 중간 보고에서는 이 때문에 일본 상선대 가운데 FOC선 등의 대응책으로서 "다양한

외국의 정부, 선박관리 회사 등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대책 실시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행정, 선사 등이 공통인식을 갖고 가능한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FOC선을 포함한 일본상선대의 자주경비 강화책을 위한 환경정비로서 '운항회사, 선박관리회사, 해상보안청과의 사이의 정보교환 체제를 확보해, 해적 습격시에 연안국, 일본 정부에의 신속한 연락, FOC선 등에서 해상보안청에의 선박정보 통보장치에 의한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해적사건 예방을 위해 연안국의 해상단속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해적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확충, 해상보안청에 대해 해적대책을 위한 업무집행 체제 강화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광둥성, 운송망 건설 2,900억위안 투자

중국 광둥성 정부가 향후 5년간 고속도로 및 해운 기간설비 확충을 위해 2,900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장위안이 광둥교통국 관계자를 인용, 제11차 5개년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고속도로와 항만 및 수로 건설에 각각 2,260억위안, 640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둥성은 2010년까지 고속도로 2,000km를 추가, 총연장 5,000km 고속도로 완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2030년말까지는 4,000억위안을 투자해 8,800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